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 제안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기자회견

2026. 4. 20 (월) 11:00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산민예총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생명의전화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YMCA 부산YWCA

개요

1. 시정 협치 분야

- ◆ 해양수도 부산 완성 1p
- ◆ 상향식 부산·경남 행정 통합 2p
- ◆ 시정 투명성 확보와 시민 알권리 실현을 위한 시민 소통 정책 3p
- ◆ 민주시민교육조례 개정으로 민주시민교육 실효성 강화 4p

2. 도시계획 · 개발 분야

- ◆ 공공기여협상제의 공공성 회복과 아파트 중심 개발 구조 개선 5p
- ◆ 북항재개발, 공공주도형 개발 방향 전환 6p
- ◆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투명성 강화 7p
- ◆ 이기대·황령산 개발 중단 및 '도시 자연 자산' 보전 체계 구축 8p
- ◆ 시내버스 준공영제 체계 혁신 9p

3. 기후 · 환경 · 에너지 분야

- ◆ 클린에너지도시 부산 비전 재천명 10p
- ◆ 이기대-황령산-낙동강하구 도시생태축 복원과 30% 보호구역 확대 12p

4. 일자리 경제 분야

- ◆ 부산 금융중심지 강화 13p
- ◆ 부산시금고의 지방은행 지정 및 지역 자금 역외 유출 방지 14p
- ◆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보조금 지원 현실화 15p

5. 재난 대응 · 사회안전망 분야

- ◆ 정의로운 녹색에너지 전환과 여성 녹색 일자리 창출 16p
- ◆ 기후재난 대응과 공공돌봄 안전망 확보 18p
- ◆ 성평등 기후 거버넌스·추진체계 마련 20p

6. 문화예술 분야

- ◆ 시민 곁에 다가서는 문화예술 정책 수립 21p
- ◆ 문화예술 향유 격차 해소 22p

1. 시정 협치 분야

의제명	해양수도 부산 완성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명 정부 해양수산부 부전 이전 의지 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6월 취임과 동시에 이전 로드맵 수립. 예산 확보 - 2025년 7월 임시청사 확정 ○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2025년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 비용 지원 및 사무소 신축비 지원, 이주 직원을 위한 지원, 국유재산 사용 시 임대료 감면 혜택 제공, 정착을 위한 주택 특별 공급 기준 마련 등 ○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2025.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부 부산 시대 개막. 대한민국 해양정책의 중심은 부산. 해양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 - 현장과 정책이 결합되면서 속도감 있고 구체적인 정책이 가능 ○ 해사법원 설치 결정 2026.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8년 3월 1일. 법원 개원 ○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및 HMM 본사 부산 이전 계획 중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부 기능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물류, 조선해양플랜트, 해양관광 등 중앙부처 흩어져 있는 주요 기능 해수부로 이관 - 예산, 조직 확대 ○ HMM 본사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울경 대한민국 조선사, 부산 HJ 중공업 위치 등 현장 선박주문생산 가능. 생산의 효율성 증대 - 공적자금 7조원 투입돼 파산 위기 넘기고 국내 최대 국적해운사로 성장. 국민 세금 투입된 HMM이 기업이 갖는 가치에 맞는 책임성 있는 역할 기대 - 정주 여건 제공 등 정부, 부산시 등 이전 준비 ○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의 실효성 확보 - 정주 여건 제공 등 정부, 부산시 등 이전 준비 ○ 북항, 해양수도 부산 거점 공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해양금융 중심지 기능

<p>의제명</p>	<p>상향식 부산·경남 행정 통합</p>
<p>배경</p>	<p>○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5급 3특' 체제를 중심으로 한 광역 행정통합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 4월 현재, 정부는 통합 지자체에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행정 권한을 약속하며 속도를 내고 있으나, 지역별 논의 상황은 차이 보임 - 주요 추진 방향 및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 지원 : 통합 광역지자체 연간 최대 5조원, 4년 임기 내 총 20조 원 규모 재정 지원 ▶권한 이양 : 통합 지역을 '서울특별시' 수준의 위상을 가진 통합특별시 격상 <p>○ 광역시도 간 특별법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시단체장에 대한 과도한 권한 부여, 책임과 권한 불일치, 중앙정부와 통합특별시 관계 설정 어떻게? 권한과 위상 혼란 - 난개발 조장과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 추진. 환경 및 기후 규제 무력화 - 집행과 감사가 동일시되는 통합특별시장 견제 기능 모호 - 타 특별자치시·도와의 역차별 발생. 타지역과의 형평성 논란 - 특별법에 담겨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검증 시스템 부재 <p>○ 부산경남 행정통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 1월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 부산경남 행정통합 입장 발표 : 2028년 총선 때 행정통합 완료, 2026년 연내 주민투표 실시, 27년 공론화 과정, 재정분권 및 자치분권 내용 담은 특별법 제정 - 2026년 4월 부산경남행정통합 특별법 발의 : 각종 특례 조항, 통합특별시장 과도한 권한 부여, 타 지역과 형평성 문제 발생 등 우려
<p>주요내용</p>	<p>○ 법률과 지방분권에 근거한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체계에 부합하는 통합특별시 권한. 정부 차원의 일관된 기준 마련 - 지역경제 성장과 연계되는 기업 및 산업 유치·성장 강화하는 투자 우선 - 토건과 난개발 대신 삶의 질과 지속가능한 성장 지향 <p>○ 기초 자치구 자치권 기반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권한 보장 확대 연계 <p>○ 주민 주체의 상향식 행정통합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공감대 형성 - 주민 합의 절차 동반 : 통합 명칭, 청사 위치, 기초지자체의 권한 축소 우려 등 지역 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주민 동의를 얻는 과정 <p>○ 지역 경제사회통합 병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통합, 행정기구와 경제생활권 통합 상호 동반 과정. 경제사회통합 위한 노력 병행. 이를 위한 교통망 통합과 인프라 확충 우선 추진 필요

의제명	시정 투명성 확보와 시민 알권리 실현을 위한 시민 소통 정책
<p>배경 및 현황</p>	<p>○ 부산시 출입기자단 운영 및 시정 정보 공개 개편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 현재 ‘부산기자실’ (8개사) ‘중앙기자실’ (13개사) ‘중앙경제기자실’ (6개사) ‘ 등 기성 언론사 중심의 기자실 제공하며 인력 및 예산 지원 - ‘기자회견장’ 운영하며 시정 브리핑 등 진행. 타 언론에도 개방되어 있다고 하나, 기성언론 중심 기자단(실) 운영으로 선택적 정보 공개, 정보 접근 불평등 초래 - 시정 브리핑, 기자회견 등은 생중계 없이 언론 대상으로만 진행해 시민 알권리 충족 한계. - 폐쇄적인 기자실 운영은 권언유착, 시정 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 큼 - 평등한 정보 접근 확보, 시민 알권리 보장 위한 완전한 ‘열린 브리핑룸’ 으로 전환 및 생중계 필요 <p>○ 부산시 의사 결정 투명성 확대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국무회의 및 부처 업무보고 생중계는 국정 운영 문턱 낮추는 계기 - 문체부 자료에 따르면, 2개의 원본 영상이 민간의 자발적 재가공으로 297개 콘텐츠로 확산되어, 341만회 조회수 기록. 시민 알권리 확대 및 행정에 대한 신뢰 제고, 정책 홍보 예산 절감 효과 보여줌 - 부산시도 정책 결정 및 추진 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으로 전환 필요
<p>주요내용</p>	<p>○ 출입기자실 및 기자회견장 ‘열린 브리핑룸’ 으로 전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기자단 중심의 ‘칸막이’ 출입기자실 운영에서 개방적 취재 지원 공간으로 전환하고, 기자회견장은 1인 미디어나 시민 기자 누구나 시정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물리적·제도적 공간으로 전환 <p>○ 시민브리핑룸(가칭)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의견 개진 및 시민기자회견 등 가능한 시민브리핑룸(가칭) 신설 - 다양한 시민 의견 확산과 건강한 공론장 형성, 소통 강화 역할 기대 <p>○ 시대변화에 걸맞은 투명한 정보 전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기자회견 및 시정 브리핑을 온라인으로 생중계 - 시민들이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실시간 소통 창구(예: 온라인 채팅 혹은 질의 게시판) 마련 - 기자회견 자료 시민에게 즉시 공개함으로써, 시민 누구나 평등하게 공공정보를 제공받는 환경 조성 <p>○ 부산시 정기 실·국장 회의 실시간 중계 및 시민 의견 수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 실·국장 회의 부산시 유튜브 채널 및 공식 홈페이지 통한 생중계 - 생중계 실시간 댓글이나 주민 참여형 피드백 창구 운영 - 시민 의견 수렴 및 검토 시스템 마련

<p>의제명</p>	<p>민주시민교육조례 개정으로 민주시민교육 실효성 강화</p>
<p>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주의 가치 확산에 따른 시민의식의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민주항쟁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식 성장 ○ 민주시민교육의 효용성 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비상계엄 발효 당시 계엄 저지를 위해 국회 앞으로 집결한 시민과 불법적인 명령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군경의 모습이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교육의 중요성과 실효성을 증명 ○ 시정의 수행 역량에 대한 민주주의 의식 제고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 집행 기구 구성원에 대한 민주주의 가치 제고 필요 - 상급 직원의 반민주적이고 불법적인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고 동조하지 않을 수 있는 민주주의 의식과 가치 내재화 필요 ○ 2023년이후 이전보다 현저히 축소 진행되는 민주시민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에서 공공위탁으로 전환이후 예산삭감과 사업운영 기관의 적극 행정 미흡으로 지역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부진
<p>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 주도의 민주시민교육 탈피, 민간주도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의공론 중심, 시민 주도의 민주시민교육 추진 - 평생교육의 일부 사업으로의 인식 탈피 ○ 민주시민교육 조례의 실효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안정적 운영 필요(정례화) - 임의조항에서 강제조항으로 변경 필요 - 민간위원 중심의 위원회 구성(민간위원 과반수이상) ○ 시 출자출연기관 및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민주주의 의식과 가치 확산 교육 내용 추가(직무교육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공무원 직무교육에 헌법 가치에 대한 교육 내용이 있으나 그 외의 공공부문 종사자에 대한 교육 내용은 없음 - 공공의 영역 전 분야에 민주주의 가치와 의식 확산

2. 도시 계획 · 개발 분야

의제명	공공기여협상제의 공공성 회복과 아파트 중심 개발 구조 개선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의 공공기여협상제는 도입 취지와 달리 한진CY, 한국유리, 다대 한진중공업 및 성창기업 부지 등 대부분 사업이 공동주택 중심으로 추진되며 사실상 '주거단지 개발 수단'으로 변질됨. '아파트 허가제' 논란 지속. 부산 5곳 공공기여협상제 아파트 1만세대 규모, 서울 12곳 6천 5백세대 ○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전환되면서 산업기능 약화 및 일자리 감소가 우려됨 ○ 공공기여금 규모는 수천억 원에 달하지만 사용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특정 사업(기초 및 지자체장 공약사업) 등에 편중될 가능성이 존재함 ○ 협상과정에서 공공이 개발방향을 제시하기보다 민간 제안을 수용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부산시의 도시계획 주도권이 약화됨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여협상 대상사업에 대해 공동주택 비율 상한을 정하고 산업·업무시설 및 일자리 창출 시설 도입을 의무화 함 ○ 민간 제안 전 부산시가 해당 부지에 대한 '공공적 활용 원칙'과 '개발 상한'을 먼저 제시하고 서울시 사례와 같이 사전컨설팅 및 기획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이 개발 방향을 선도하는 구조로 개선함 ○ 산업 용지 확보 및 기업 유치 인센티브 적용 (개발 부지에 일자리 창출(오피스, 연구시설 등), 노후 산업 부지의 고도화시 공공기여 비율 일정 완화 등) ○ 공공기여금이 특정 사업(예: 수영강 휴먼브릿지)에 치중되거나 기준 없이 사용되지 않도록 지역균형발전, 산업과 일자리 창출 집행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 설정.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협상 전담 조직에 도시계획을 비롯한 다양한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사회 추천 전문가 참여를 보장해 협상 과정과 결과를 시민들이 검증할 수 있도록 공개 함

<p>의제명</p>	<p>북항 재개발, 공공주도형 개발 방향 전환</p>
<p>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항재개발 사업 난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개발 : 랜드마크 개발 표류, 트램 미개통, 숙박시설 중심 도입 등 - 2단계 사업 :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무산으로 초기 추진 동력 일부 상실, 2026년 상반기 사업계획 수립 용역 완료 예정, 사업 계획 등 전체 사업 지연 - 현재 북항재개발 사업 난항은 부지 매각 방식 등 민간 개발방식 한계 등 이유임 ○ 항만재개발법 및 항만공사법 개정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항만공사 개발 주체 길 열려, 북항재개발 1단계 랜드마크 부지 개발 가능성 높음 - 해수부, 부산시, 부산항만공사 통합협의체 구성과 사업 추진 ○ 해양기관 클러스터 조성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2월. 해양수산부, ‘부산항 북항재개발 해양 기관 클러스터 조성 업무 협약’ 체결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한국해운조합) -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 활성화와 산학연 인프라 협력을 위해 부산항만공사 등 6개 기관과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구역 내 ‘복합항만지구’ 약 7만 7천 m2 부지에 해양 관련 기관 클러스터 조성 합의 - 7개 기관 이외에도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해양 관련 단체 추가 유치 계획
<p>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항, 공공주도형 개발 방향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 선입주 후 민간 자발적 유입 선순환 구조 형성 - ‘북항 해양행정 복합도시’ 건설. 공공성 확보와 정책 효율성 제고 ○ 북항, 해양수도 부산 실현 거점 허브 공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 연구, 산업, 해양금융, 법률 등 집적 형성과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 신청사 입주,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HMM 본사 등 이전 - 북항, 부산해양금융중심지 정책 허브 공간 ○ 북항재개발 1단계 랜드마크 부지 제3섹터 방식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PA, 부산시, 민간 : 제3섹터 개발 방식 추진 ○ 북항재개발 원도심과 통합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항과 중구·동구·영도·서구 등 원도심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연결을 넘어 산업, 문화, 인구 구조까지 통합하는 도시재생 전략이어야 한다. - 북항을 해양행정·비즈니스 중심지로 구축하고, 원도심을 문화·생활·서비스 중심지로 재편하는 기능 분담 전략이 필요

의제명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투명성 강화
배경	<p>○ 부산 도시계획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의 체계적인 개발과 보존을 위해 도시계획 및 각종 개발행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도시계획 부문 최고 위원회 - 현재 12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중(2025년 7월1일 ~ 2027년 6월 30일). 위원 선정 공모 방식. 공무원(4명), 시의원(4명), 도시계획(5명), 도시설계(5명), 도시안전(2명), 건축주택(3명), 교통경제(2명), 인문사회, 언론, 교육, 법조, 부동산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부분 공개 <p>○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 선정시 공정성 및 투명성 논란 - 부산시 추진 사업의 거수기 역할 또는 여론의 방패막이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 - 10기(2021년7월~2023년6월), 11기(2023년7월~2025년6월), 현재 12기. 6년 동안 시민사회 추천 위원 없음 - LCT, 해안가 및 구릉지 초고층 건물 도입 등 부산지역 난개발 사업으로 인한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신뢰도 떨어짐
주요내용	<p>○ 도시계획위원회 전문성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 분야 세분화. 도시계획·도시공학·도시설계·도시행정·도시행정 등 관련 분야 제시 -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 확보 비율을 조례에서 규정 - 위원들 자질 함양 위한 정기적인 교육 및 워크숍 개최 <p>○ 도시계획위원회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촉 가능 횟수 제한,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의견서 제출 의무화 - 위원들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해 자격 미달의 위원들을 퇴출 방안. 최소 1년 단위로 본위원회 출석률, 안건 검토 의견서 제출, 회의 참여 정도 등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위원의 재위촉 및 해촉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p>○ 도시계획위원 선임 절차에 대한 공정성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의 연임 가능 횟수와 위촉 가능 횟수를 조례에 규정하여 특정인이 한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으로 장기집권하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 마련 - 위원회 위원 구성 공정성 제고 및 전문성 등 객관적 평가위해 외부민간전문가 참여하는 ‘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운영.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p>○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및 회의 공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광역시 2024년 3월 전국 최초 도시계획위원회 ‘인터넷 및 지상파 생중계’ 실시. 광주광역시 2023년 9월 조례 개정으로 도시계획위원회 기본 공개 원칙 천명, 공개 방식은 회의장 방청, 방송 또는 인터넷 중계 등(다만 공개 방식은 도시계획위원회 의결로 결정) - 미국 뉴욕 및 일본 도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과정 생중계. 시민들 회의 직접 참여하여 의견 개진 기회 폭넓게 제공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단계적 공개. 시민 참관 형식으로 회의 공개 시작. 인터넷 및 지상파 방송 공개, 추후엔 안건에 대한 의견 개진까지 공개 수준 범위 확대. 이를 위한 부산 도시계획 조례 개정 <p>○ 부산시도시계획상임기획단 기능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조직 확대 및 기능 강화하여 상임위원들의 전문적 검토 역량 제고

의제명	이기대·황령산 개발 중단 및 '도시 자연 자산' 보전 체계 구축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기대 개발은 도시기본계획·경관계획과 충돌하는 사업임에도 지구단위 계획 '의제처리'를 통해 핵심 도시계획 절차가 생략되었고 황령산 개발 역시 대법원의 마하사 사찰림 수용 부당 판결 확정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행정적 절차를 보완하여 개발을 강행하고자 함 ○ 특히 이기대 개발 심의는 통합심의 분리,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등 절차적 위법성과 형식적 심의 구조로 인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상황임 ○ 현재 행정 효율을 위한 '절차 간소화' 수단인 의제처리가 부산에서는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와 주민공람을 우회하는 '특혜성 인허가' 수단으로 변질됨 (2015년~2025년 사이 전국 주택건설사업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고시 15건 중 13건(약 87%)이 부산에 집중됨) ○ 사업자 제안을 기반으로 별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주민공람 없이 통합심의로 계획이 확정되며, 도시계획 결정권이 민간사업자 중심으로 이동하는 구조 발생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기대 입구 아파트 및 황령산 봉수전망대 관리 보존 계획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기대 입구 아파트 사업 승인을 보류하고 공공성·환경성 기준에 따라 재평가 하여 필요시 공공매입 및 공원화를 추진함 - 자연을 크게 훼손하는 황령산 봉수전망대 및 로프웨이(케이블카) 조성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생태적 관리 모델로 전환함 - 이기대·황령산 등 핵심 자연자산을 '보전 중심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개발 허용 기준을 강화하여 고층 주거 및 대규모 상업개발을 제한함 ○ 부산 도시계획 공공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성이 높은 지역의 개발사업은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위원회 등 개별 심의 절차 필수 이행을 의무화 해 부산 도시계획의 공공성 강화 - 지구단위계획 지정 등 주택법 등에 따른 인허가 의제가 도시계획의 근간을 흔들지 않도록 적용 대상을 엄격히 제한함

의제명	시내버스 준공영제 체계 혁신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내버스 수송분담률 지속적 감소(또는 정체) : 2013년 (21.8%) → 2024년 (18.8%). 3% 감소 ○ 노선 수 : 2010년 133개 → 2024년 147개. 14개 노선 증가 ○ 운행거리(km, 1개 노선평균) : 2012년 45.44 → 2024년 51.37. 5.93km 증가 ○ 1일 운행횟수(1개 노선평균) : 2012년 133.54 → 2024년 91.20. 42.64회 감소 ○ 부산공영차고지 3곳 : 동부산, 금정, 강서. 주로 외곽 위치 ○ 정류장 개수 : 2019년 (3,599개) → 2024년 (3,861개). 262개 증가 ○ 운행거리 (천km/연) : 2019년 228,301 → 2024년 (205,405) 10.0% 감소 ○ 재정지원금 급증 : 2015년 (1.263억원) → 2024년 (2,600억원). 2배 이상 증가 ○ 부산시민 표준운송원가 신뢰 저하 : 임원 및 관리직 과다 산정, 적자 상황에 주 주 배당 문제 등 ※ 운행횟수는 새벽 막차 시간 조정, 휴계시간 보장, 주 52시간제 적용 등 노선별 운행횟수 금감 ※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환승시스템 개선,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승무원 등 종사자 임금 및 고용 안정 등 긍정적 측면 존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수송 분담률 정체, 재정지원금 급증, 시내버스 배차 간격 증가 등 개선해야 할 부분 많이 존재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간 합병 통한 효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33개 업체. 업체 분산으로 차고지 운영, 정비 인력, 관리조직, 부품 구매, 교육, 회계 대응 등에서 고정비와 간접비가 중복 우려 - 노선 및 차고지 중심 통폐합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 인센티브 제공 등 부산시 시내버스 업체간 통폐합 유도 - ○ 부산형 공공버스 도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약자, 교통취약지역, 관광지 등 중심 운행 - 수요응답형버스 (DRT), 투어버스 확대 - ○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차 간격 촘촘히 : 전체 10분 이내 - 도심스테이션 또는 환승센터 설치 : 부산 권역별 주요 도심지 내 설치, 배차 간격 최소 효과 기대. 차고지 외곽 편중은 노선 효율성 저하와 불필요한 이동으로 연료비와 인건비 낭비 초래 - 시내버스 대기시설 고급화 : 장시간 대기시설 냉난방, 비가림 등 설치 - 지연 운행 방지 : 부산시 운행실적 관리 감독 강화 (정기 실사,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침 반영), 인가 대수 및 인가 횟수 적절성 검토 - ○ 표준운송원가 산정방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직무분석 효율적 개선 : 임원, 관리직 인원 감축 효과 기대

3. 기후 · 환경 · 에너지 분야

의제명	클린에너지도시 부산 비전 재천명														
배경	<p>○ 대한민국 최초의 핵발전소 고리1호기 2017년 6월 18일 지정 영구정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시 서병수 부산시장 '2030년 클린에너지 도시의 원년'을 선포 -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구조에서 탈피하여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추진 - 이후 오거돈 시장 또한 2019년 '클린에너지도시 부산' 이라는 도시 비전 채택함. 구체적인 목표는 아래와 같음. - 부산시의 '클린에너지도시 부산' 비전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시민들과 함께 만든 에너지 정책의 '사회적 합의' 라고 볼 수 있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th> <th>2030</th> <th>2050</th> </tr> </thead> <tbody> <tr> <td>신재생에너지전력자립률(%)</td> <td>20</td> <td>50</td> </tr> <tr> <td>에너지 효율화(%)</td> <td>18</td> <td>34</td> </tr> </tbody> </table>		2030	2050	신재생에너지전력자립률(%)	20	50	에너지 효율화(%)	18	34					
		2030	2050												
	신재생에너지전력자립률(%)	20	50												
	에너지 효율화(%)	18	34												
	<p>○ '클린에너지도시 부산' 비전과 현실의 괴리</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th> <th>2018</th> <th>2019</th> <th>2020</th> <th>2021</th> <th>2022</th> <th>2023</th> </tr> </thead> <tbody> <tr> <td>자립률(%)</td> <td>2.41</td> <td>2.4</td> <td>2.32</td> <td>2.26</td> <td>2.51</td> <td>2.62</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지만 '클린에너지도시 부산' 이라는 목표와는 반대로 부산의 신재생에너지 자립률은 2% 초중반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클린에너지도시 부산' 을 비전으로 작성된 「2050 클린에너지 마스터플랜」은 「부산광역시 6차 지역에너지계획」, 「부산광역시 7차 지역에너지계획」로 지나며 목표치는 점점 하향되고 있는 상황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자립률(%)	2.41	2.4	2.32	2.26	2.51	2.62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자립률(%)	2.41	2.4	2.32	2.26	2.51	2.62								
	<p>○ 노후핵발전소 고리2호기 수명연장 승인과 남은 문제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시작한 노후핵발전소 고리2호기는 작년 수명연장 승인이 결정되었고, 현재 재가동 중에 있음. 고리2호기뿐만 아니라 고리3·4호기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명연장 절차 과정을 밟을 예정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body> <tr> <td>· 2025년 11월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고리2호기 수명연장 승인 결정</td> </tr> <tr> <td>· 2026년 3월 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고리2호기 임계 허용</td> </tr> <tr> <td>· 2026년 4월 6일 오전 7시 46분 정상출력 100%에 도달</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년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핵발전소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계획을 확정 : 현재 부산 기장군, 경북 경주시에서 SMR 유치 신청을 한 상황이며, 4월부터 6월까지 한국수력원자력은 부지선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임. : SMR은 대형 핵발전소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 설계로만 존재하며 안전성, 경제성 등이 검증이 받은 적은 없음. - 2025년 3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통과되고, '고준위방폐물관리위원회'가 구성된 상황에서 고리핵발전소 내 임시저장시설 건설 또한 추진될 예정 : 이대로의 경로가 지속된다면 안전하지 않은 핵폐기물을 계속해서 양산하고 저장하는 구조가 고착화될 예정 	· 2025년 11월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고리2호기 수명연장 승인 결정	· 2026년 3월 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고리2호기 임계 허용	· 2026년 4월 6일 오전 7시 46분 정상출력 100%에 도달											
	· 2025년 11월 13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고리2호기 수명연장 승인 결정														
	· 2026년 3월 31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고리2호기 임계 허용														
· 2026년 4월 6일 오전 7시 46분 정상출력 100%에 도달															
<p>○ 핵발전,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에너지 믹스</p>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클린에너지도시 부산 비전 재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에 “핵발전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 을 재확인 - 고리2·3·4호기 수명연장·SMR 유치 중단 요구 - 부지내임시저장지설 건설 중단 요구 -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 강화 ○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 태양광 의무화에 따른 주민수용성, 공공성을 포괄한 ‘주차장 태양광 조례’ 제정 - 공사·공단·공공기관 부지 발굴 노력 - 부산시 통합에너지센터 운영 - SMR 관련 투자 대신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	---

의제명	이기대-황령산-낙동강하구 도시생태축 복원과 30% 보호구역 확대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총회에서 생물다양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새로운 기준(2030년까지 국토의 30% 보호, GBF 30×30) 달성이 제시됨. -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에 따라 2030년까지 육상과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관리하는 목표가 제시되어 있으나, 부산의 보호구역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 통합 생태축 관리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은 해안-산지-하천이 연결된 도시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생태계는 개별적으로 관리되며 단절이 심화되고 있음. - 이기대-황령산-삼락생태공원-맥도생태공원으로 이어지는 핵심 생태축은 도로, 철도, 개발사업으로 단절되어 있으며, 보호보다 이용 중심의 관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 부산시 차원의 육상, 해상보호구역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대책이 필요한 상황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의 생태축을 중심으로 보호구역의 확대와 보호 동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기대-황령산-삼락-맥도를 '부산 1호 도시생태축'으로 지정 - 이기대-황령산을 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보호지역으로 단계적 지정 - 낙동강 하구(삼락·맥도) 습지 복원 및 보호구역 확대 - 생태축 내 개발사업 사전협의 및 영향검토 의무화 - 개발 사업의 환경영향 사전검토 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난개발 방지 및 대응 조례」 제정 - 「부산시 도시생태축 및 생물다양성 보전 조례」를 제정하여 보호구역 지정 기준과 개발사업 협의 절차를 명시 ○ 해양수도 부산의 정책 정합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강화 ○ 국제 기준(30×30)에 부합하는 도시 생태정책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년까지 육상·해양 보호구역 각각 30% 달성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 수립

4. 일자리 경제 분야

의제명	부산 금융중심지 강화
배경	<p>○ 금융위원회 지난 2023년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 계획 수립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 문현지구 ▶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인근 금융권 데이터센터 구축과 부산형 스케일업 모펀드 조성 등을 통한 ‘금융인프라 및 금융생태계 강화’ . ▶ 해양진흥공사 및 해양금융종합센터 기능 확대를 통한 ‘해양특화금융 활성화’ ▶ BIFC 3단계 공간의 디지털금융기업 집적과 블록체인산업 육성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디지털 금융역량 강화’ 를 발전 전략으로 삼음 <p>○ 부산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 경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7년 12월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 2008년 12월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 2009년 1월 서울 여의도를 ‘종합 금융중심지’ , 부산 문현단지를 ‘해양 파생상품 특화 금융중심지’ 로 지정 - 2014년 9월 해양금융종합센터 설치 - 2014년 ~ 2015년 금융공기업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주택도시보증공사) BIFC 이전 - 2015년 BIFC 1단계 완공 - 2018년 BIFC 2단계 완공 - 2020년 7월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설립 <p>○ 부산금융중심지 정책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 파생상품 특화 금융중심지 전략 부재 - 금융산업 생태계 조성 부족 : 금융 관련 산업 및 지역 산업과의 협력 부족으로 경제성장 지원 제한적. 금융공기업 집적 성과 있으나 금융중심지 생태계 조성 과 혁신산업 육성 기여 미흡 - 외국계 금융기관 유치 실적 미흡 - 지역 주력 산업과의 유기적 연계 미흡 <p>○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거래소 지주화와 코스닥 분리 정책</p>
주요내용	<p>○ 해양·물류·파생 금융 메가 클러스터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이전 - 해양 물류 관련 국내외 민간 기업 이전 유치 - 대규모 해양 인프라 펀드 조성 : 친환경 선박 전환 스마트 항만 개발 등에 투자. 글로벌 VC가 부산에서 자금조달 가능하도록 유도 - 파생 관련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 <p>○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금융 선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 강점 극대화 - 디지털 자산거래소를 실물자산 토큰화 시장으로 육성 - 국내외 디지털 자산운용사 유치 <p>○ 동남권투자공사 확대 설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 자동차 등 동남권 산업 투자 촉진 및 금융공공기관 연계하여 전략적 투자 확산 기대

의제명	부산시금고의 지방은행 지정 및 지역자금 역외유출 방지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중은행의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운 공세로 지방은행은 시금고 선정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지역 금융 시스템의 위기임 ○ 지방은행은 지역 중소기업 금융, 소상공인 지원, 지역 재투자 등 지역경제의 핵심 역할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자금과의 연계는 매우 부족한 상황임 ○ 부산 이전 공공기관 중 지방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활용하는 비율이 매우 낮아 지역 자금 역외 유출 심각.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경제 기여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함 ○ 최근 10년 이내 지방 이전 공공기관 38곳 중 지방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선정한 기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유일. 나머지 기관 모두 시중은행(2026년 2월말 기준. 국회 정무위 김상훈 의원실). 공공기관 이전 취지인 '지역균형발전'에 역행 ○ 단순 경쟁 구조로는 지방은행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기 어려우며, 이는 곧 지역 경제 기반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리나 재무 안정성 위주의 시중은행에 유리한 조항을 삭제하고 '지역경제 기여도' 및 '지역 재투자 실적'을 최우선 평가항목으로 설정해 시금고 선정 기준을 전면 개편함 ○ 시금고를 '경쟁입찰 대상'이 아닌 '지역금융 기반시설'로 재정의하고 지방은행 중심 시금고 지정 원칙 도입 (복수 금고 운영시 지방은행을 중심 금고로 지정함) ○ 부산시 및 산하 공공기관-출자출연 기관의 자금 예치 비율을 지방은행 중심으로 거래 비율을 확대하고 (일정 비율 이상 지방은행 예치 기준 설정) 부산 이전 공공기관의 주거래은행 또는 자금 예치에 지방은행 참여를 협약이나 권고 방식으로 참여 유도함 ○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 '지역금융 기여도' 반영 ○ 지방은행이 지역 금고를 안정적으로 맡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방은행 보호·육성 관련 법제 개선을 건의하고 지방은행 중심 시금고 지정 원칙을 부산시 조례 및 내부 기준으로 명문화

의제명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보조금 지원 현실화
배경	<p>○ 부산 여성 일자리 환경 전국 가장 취약한 수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고용률 전국 최하위권, 미취업 여성 다수 40~50대 중장년 - 여성 일자리의 직종과 산업 편중 심화 <p>○ 여성인력개발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부산 6개 센터(부산진, 동래, 해운대, 사상, 동구, 사하) 기관 존재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경력단절 예방, 전문직업능력 개발, 취·창업 알선 등 다양한 공공 기능을 수행 <p>○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비 보조금 비중 지속적 감소 : 2015년 15.5%에서 2020년 13.3%, 2021년 이후에는 10% 이하로 떨어져 2024년은 10.8% 수준 - 새일센터·창업지원 등 사업의 비중 증대 : 2015년 35% → 2024년 38.9% - 수강료 수입 급감 : 2015년 13.8% → 2024년 3.4%. 이는 △교육수요 감소, △프로그램 유료기반 운영의 한계, △센터별 자생 자원 확보 능력의 약화 의미 - 공모사업 의존도 급증 : 2015년 30.7% → 2024년 45.7%. 공모사업 의존 재정구조는 △직원 업무량·소진 증가, △수행 실패 시 예산절벽, △연속성 확보 어려움의 구조적 문제 지남 <p>○ 현재 구조는 센터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부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정책 목표 달성 불가능함. 이에 대한 개선 필요</p>
주요내용	<p>○ 여성인력개발센터 ‘공공일자리 정책 중심축’ 재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핵심 정책 과제 설정하고 센터 중심 여성 일자리 정책 추진 <p>○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보조금 비율 현실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여성인력개발센터 평균 운영보조금 수준(2024년 기준 센터당 약 267백만원) - 센터가 단순히 교육기관을 넘어 지자체의 여성 고용 정책수행하는 핵심 거점으로 서 안정적인 예산 확보는 기본 <p>○ 공모사업 중심 불안정한 재정 구조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교육 혁신 · 디지털 전환 교육 · 여성 맞춤형 일자리 연계 등 새로운 정책 수요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센터 운영비와 교육 프로그램에 공공투자를 확대

5. 재난 대응 · 사회 안전망 분야

의제명	정의로운 녹색에너지 전환과 여성 녹색 일자리 창출
배경	<p>○ 녹색일자리 성별 통계·목표 관리 체계 미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정의로운 전환 언급 있으나 성별 고용 목표 규정 없음 - 탄소중립 시행 계획에 성별 일자리 현황 포함 의무 규정 없음 - 녹색일자리 성별 분리 실태조사 정례화 체계 미흡함 - 여성 참여 목표치 설정·관리 제도화 부족함 - 일자리 전환 정책이 성별 고용격차를 구조적으로 점검하지 못하는 상태임 <p>○ 훈련-채용-재정지원 연계의 성평등 장치 부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채용-재정지원 연계의 성평등 장치 부족함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녹색직종 특화 훈련과정 제한적임 - 태양광·건물에너지진단·환경관리 등 전환 핵심 직종 여성 접근성 낮음 - 탄소중립 사업 보조금에 여성 고용 비율 요건이 없음 - 공공사업을 발주할 때 여성 고용이나 성평등 기준을 반드시 적용하는 전국 공통 규정 없음
주요 내용	<p>○ 녹색 일자리 성별 분리 통계 의무 생산 및 정보 공개</p> <p>: 새롭게 창출되는 녹색일자리 내 성별 격차 파악을 통해 문제해결 전략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탄소중립 시행계획에 녹색일자리 성별 분포 현황을 의무적으로 명시 - 지역 단위 '녹색일자리 성별 현황 지도' 작성 및 공개 - 통계 수집 지표에 직종별·임금대별·고용형태별 성별 분포 통계 포함 <p>○ 여성 대상 녹색직종 직업훈련 과정 신설</p> <p>: 부산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폴리텍대학이 협력하여 훈련과정 운영 및 취업 연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와 새일센터 간 협약을 통해 녹색직종 훈련과정 개발 비용 지원 - 태양광 시스템 O&M(운영관리), 건물에너지진단사, 환경관리사, 전기차 정비 보조 등의 과정 우선 신설 - 훈련 이수 후 지역 탄소중립 관련 공공사업에 우선 채용 연계 협약 - 훈련 참여 여성에게 교통비·육아지원비 지급하여 훈련 접근성 강화 - 단기(3개월) 과정 설계로 경력단절 여성의 빠른 복귀 고려 - 자원순환 분야 여성 직업훈련 과정 신설 및 건강·안전 교육 의무화 - 여성 건강 위험이 높은 자원순환 업종에 정기 건강검진 지원 확대

○ 부산시의 탄소중립 공공사업 발주 과정에 여성 고용 확대 기준 의무화

: 녹색사업 내 여성 대표 기업 참여 확대, 여성 고용 증가

- 부산시의 녹색사업 계약 조건에 '여성 고용 계획' 제출 의무화
- 여성 고용 비율 20% 이상 기업에 입찰 가점 부여
- 여성 대표이사(지분 30% 이상) 기업의 녹색사업 참여에 우선 계약 또는 수의계약 허용
- 계약 이행 중 여성 고용 현황 분기별 보고 의무화
- 녹색 분야 여성 기업가 창업 보조금 신설(여성1인기업, 지역 에너지 협동조합 포함)

○ 부산시 녹색일자리 사업의 성별 임금 격차 모니터링 및 동일임금 원칙 적용

- 녹색전환 과정에서의 성별 임금 격차 감소
- 부산시 탄소중립 관련 지원금 수혜 기업에 성별 임금 공시 의무화
- 부산시 직접 고용 녹색일자리(공공근로·사회서비스 등)에 동일임금 지침 우선 적용
- 여성 비율 높은 환경관리·생태복원 직종의 '녹색 생활임금' 기준 설정

의제명	기후재난 대응과 공공돌봄 안전망 확보
배경	<p>○ 재난 대비·대응·복구 단계의 성별 영향 분석 부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성별 분리 통계 및 성별 영향 분석 관련 조항 없음 - 기후 취약계층 지원 근거가 포함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성별 영향 분석 조항 없음 -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재난 및 기후 분야 적용 실적이 미미하며 의무 적용 규정 없음 - 성별 분리 데이터 미흡으로 피해 실태 파악이 어려워 취약계층을 고려한 정책 설계 및 정확한 정책 효과 분석 어려움 <p>○ 재난 대응 정책의 성인지 관점 미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안전위원회에서 여성 및 취약계층의 참여 비율 낮음 - 지자체 재난관리계획에 젠더기반 폭력에 대한 사전 대응 지침은 거의 없음 - 성별 특성을 고려한 대피소 설계 기준이 미비하며 법제화되어 있지 않음 - 여성1인가구, 장애 여성, 임산부, 영유아 등 취약계층의 우선 보호 체계 없음 <p>○ 재난 대응 체계 내 돌봄 위기 대응 계획 부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재난 대응 정책은 돌봄 기능을 충분히 포함하지 못하고 있음 - 재난 발생 시 독거노인 및 중증 장애인의 고립, 돌봄 시설 운영 중단, 돌봄 서비스 중단 등의 상황에 대처하는 공공 돌봄 안전망 없음
주요 내용	<p>○ 모든 재난관리계획에 성별영향평가 도입 의무화 : 반복되는 재난 시 여성 사망률 격차 문제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관리계획 성별영향평가 의무화 조례 제정 - 재난 피해 통계 성별 분리 생산 및 연 1회 공개 - 재난안전위원회 여성 참여 비율 40% 이상 확대 - 기후 취약계층 여성 대상 영향 분석 항목 신설 <p>○ 여성친화형 대피소 설계 기준 적용 제도화 : 성별 특성 고려한 대피소 설계 의무화로 2차 피해 예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분리 공간·잠금장치·조명·위생용품 설치 기준 법제화 - 임산부·영유아 동반 가족 우선 보호 구역 운영 - 장애 여성·고령 여성 접근성 기준 별도 명시 - 대피소 성폭력 예방 지침 및 긴급보호 신고 시스템 설치 <p>○ 재난 발생 시 즉시 가동 긴급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 : 여성에게 집중되는 돌봄 부담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긴급돌봄 즉시 가동 체계 조례 의무화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데이터 기반 우선 보호 시스템 - 의료·돌봄 연계 거점 쉼터 지정 및 24시간 비상연락 체계 - 돌봄노동자 재난 안전 기준 및 보호 지침 마련 - 마을 단위 돌봄 네트워크 활성화 및 연계 협력망 구축

○ 성인지 돌봄·재난 정책 법제화

: 돌봄 부담 성별 영향 분석으로 재난 이후 여성의 사회적 불평등 확대 방지

- 성인지 재난·돌봄 정책 조례 성인지 관점을 반영한 개정
- 재난 전·중·후 단계별 돌봄 공백 최소화 매뉴얼 제작
- 돌봄 부담 성별 영향 분석 항목 의무화
- 사회복지·의료·시민단체 재난돌봄 협력망 구축
- 기후 쉼터 내 돌봄 기능 강화 및 24시간 운영

○ 젠더기반 폭력 예방·대응 매뉴얼 표준화 의무화

: 사전 대응 지침 마련을 통해 재난 시 성폭력 위험에 구조적 대응 및 지자체별 대응 편차 감소

- 재난관리계획 내 젠더기반 폭력 예방 지침 표준화 의무화
- 대피소 성폭력 신고·긴급보호 시스템 설치 기준 마련 및 재난 시 젠더기반 폭력 담당자 지정 및 역할 명시
- 재난 단계별 피해자 지원 연계 체계 구축
- 지자체 공무원·자원봉사자 대상 예방 교육 의무화

○ 한부모·여성 가구 맞춤형 지원 체계 명문화

: 에너지, 주거, 생활안전을 포함한 맞춤형 지원으로 기후재난 취약 계층을 실질적으로 지원

- 한부모·여성 가구 기후재난 지원 우선 대상 조례 명문화
- 재난지원 기준에 세대주 여부 무관한 실질 취약가구 포함
- 에너지 빈곤 여성 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 체계 마련
- 임시 주거 지원 및 재난 이후 주거 안정 연계 프로그램

의제명	성평등 기후 거버넌스·추진체계 마련
배경	<p>○ 법·제도적 의무 규정 부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위원회 설치 근거는 있으나 성별균형 의무 지켜지고 있지 않음 - 부산광역시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라고 조례에서 밝히고 있으나 실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구성시에 남성 위주로만 구성되는 경우가 많음 - 성별영향평가 제도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조례에 의무 적용 규정 없어 유명무실함 <p>○ 예산·통계·집행 단계의 성별 관점 미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중이나 기후예산 별도 성인지 분류체계가 없음 - 기후재정이 성별격차에 미치는 영향 분석 체계 없음 - 성별 분리 데이터 미흡으로 정책 효과 분석 어려움 - 결과적으로 정책 집행 이후 형평성 점검 구조 미작동 상태임
주요 내용	<p>○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성별균형 조례 비율 명문화 : 의사결정 구조의 성별 편중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조례에 특정 성별 60% 초과 금지 조항 신설 - 젠더·사회정책 전문가의 위원회 참여 의무화 - 여성·청년·돌봄·취약계층 등 사회계층 대표성 확보 규정 마련 - 위원회 구성 현황 및 성별 비율을 성별 통계로 연 1회 공개 - 기후위원회와 성평등 관련 위원회 간 정례 협의체 구성 <p>○ 성별영향평가 의무조항신설 :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조례 개정 및 지역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영향평가 의무조항 신설로 탄소 정책 설계 단계에서집행계획 단계까지 불평등 사전 차단 성평등 관점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조례」에 성평등 적용 의무조항 비율 명문화 - 기후기본계획 및 주요 기후정책 수립 시 성별영향평가 의무화 - 성별영향평가 분석 결과를 계획서·연차보고서에 포함하여 공개 - 대형 개발사업 및 에너지전환 사업에 성별영향 검토 절차 포함 - 기후위기 취약계층 여성(저소득·고령·이주·한부모 등) 대상 영향 분석 항목 별도 마련 - 지역 단위 '기후 성별영향 현황 보고서' 연 1회 작성·공개 <p>○ 기후예산 내 성인지 예산 분류 체계 신설 : 공공재정의 형평성 점검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영향평가 의무 적용 조례화 - 연간 시행계획 및 세부 집행계획 단계까지 성평등 관점 반영 의무화 - 기후정책 성과지표에 성평등 지표(성별 수혜 비율, 격차 완화 정도 등) 포함 - 연차 평가에 성평등 영향 분석 결과를 반영하고 환류 체계 구축 <p>○ 기후 관련 통계 성별 분리 생산·공개 : 재난에너지건강고용 통계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예산 항목 내 '성인지 기후예산' 분류 체계 신설 및 조례화 - 예산 편성 단계에서 성별 수혜 분석 의무화 - 성인지 예산서에 기후 분야를 별도 관리 항목으로 포함 - 기후 관련 기금 운용 시 성평등 형평성 기준 명시 - 부산시 재정지원 시 성평등 이행 여부를 평가 기준에 반영

6. 문화예술 분야

의제명	시민 곁에 다가서는 문화예술 정책 수립
배경	<p>○ 대다수 시민들과 괴리되어 있는 랜드마크 건설형 문화예술 정책 - 북향 오페라하우스, 이기대 국제 아트센터 등 랜드마크 건립과 대형 국제 행사에 치중되어 도시 브랜딩에는 기여할 수 있을지 모르나, 정작 시민의 삶과는 괴리됨</p> <p>○ 물리적·심리적 문턱이 존재 - 화려한 대형 공연장은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을 주며, 원도심이나 서부 산권 시민들에게는 여전히 접근하기 어려운 ‘먼 곳의 이야기’임</p> <p>○ 공급자 중심의 문화예술 정책과 이로 인한 낙수효과의 한계 - 대규모 시설을 지으면 문화 향유 기회가 저절로 시민 전체로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실제 시민들의 내 집 앞 문화 생활의 체감도는 상당히 저조</p> <p>○ 지역 예술 생태계의 공동화 - 대규모 인프라 유지비에 예산이 집중되면서, 정작 동네 골목에서 활동하는 기초 예술인들과 소규모 문화 공간에 대한 지원은 뒷전</p>
주요내용	<p>○ 15분 생활권 문화 거점 공간 조성 - 유휴 공간의 예술적 재탄생: 폐교, 낡은 동사무소, 빈집 등을 리모델링하여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 복합문화공간’을 16개 구·군 전역에 배치 - 동네 갤러리 & 연습실 보급: 거창한 미술관 대신 아파트 상가나 골목 빈 점포를 활용한 ‘골목 갤러리’를 지원하여 시민의 접근성 극대화</p> <p>○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 콘텐츠 개발 - 예술가와 시민의 공생: 예술가들에게 활동비와 작업 공간을 지원하는 대신,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 교육이나 소규모 공연 정례화 - 지역 맞춤형 콘텐츠 개발: 해당 동네의 역사나 이야기를 담은 마을 연극, 사진전 등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문화 정착</p> <p>○ 부산형 ‘문화 예술 바우처’ 확대 및 타겟팅 - 지역 소공연장 활성화: 지역 내 소극장이나 전시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발급하여 고사 위기의 기초 예술 현장에 활력 제공 - 문화 소외계층 실질 지원: 노인, 청년, 1인 가구 등 세대별 특성에 맞춘 ‘찾아가는 배달 공연’ 서비스 시행</p> <p>○ 시민 예술가 육성 ‘1인 1기(技)’ 프로젝트 - 수동적 관람에서 능동적 참여로: 시민들이 직접 악기를 배우고, 그림을 그리고,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를 동네 단위로 구축 - 시민 예술제 개최: 연 1회, 랜드마크 광장이 아닌 동네 공원과 골목에서 시민들이 직접 만든 작품을 뽐내는 ‘우리 동네 예술 축제’ 개최</p>

의제명	문화예술 향유 격차 해소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이엔드' 그늘에 가려진 시민의 일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의 문화 정책은 일부 계층을 위한 하이엔드(High-end) 문화 소비와 특정 지역 중심의 행정에 치중되어 있음 ○ 문화 향유의 양극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가의 공연이나 전시는 평범한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기 어려움 - 예술이 '특별한 날 마음먹고 찾아가야 하는 것'이 되면서, 서민들의 심리적 거리감은 더욱 멀어지고 있음 ○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 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려한 시설과 외형적인 성과에 집중, 지역 예술 생태계의 기초 체력 약화 - 대형 공연장을 채울 콘텐츠나 지역 예술가들에 대한 세밀한 지원 부재 ○ 공급자 위주의 일방향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능동적 문화 향유'보다는 단순 관람 형태의 '수동적 소비'에 예산이 편중 - 지속 가능한 문화 공동체 형성이 어려움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부산·원도심 '예술 모세혈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을 '문화 활력 지구'로 지정 - 대형 시설 건립 예산을 쪼개어 수십 개의 '동네 밀착형 소규모 문화 거점' 조성 ○ '부산형 아트-인-숍(Art-in-Shop)'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네의 카페, 독립서점 등을 '우리 동네 작은 미술관/공연장'으로 지정 - 동네 가게의 예술 활동에 부산시가 예술가 출연료와 홍보비 지원 - 시민들이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예술 향유 ○ 밤이 있는 문화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민들의 퇴근 후 문화향유를 위해 공공 문화시설의 운영 시간 연장 - 야간 전문 프로그램 배치 - 주택가 '밤거리 버스킹' 구역 지정 ○ 공공 광고판 '시민 예술 공유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광고판 중 일정 비율을 '우리 동네 예술 소식' 전용으로 할당 - 위치 기반 문화예술 정보 실시간 알림 강화하여 정보 접근 격차 해소 ○ 문화 협치 예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군별 문화 예산의 일부를 주민들이 직접 투표하여 결정 - 시민 큐레이터 양성: 지역 주민들이 '우리 동네 축제'를 직접 기획하고 예산을 집행하도록 교육하고 지원하여, 공급자 중심의 행정을 시민 주도형으로 전환